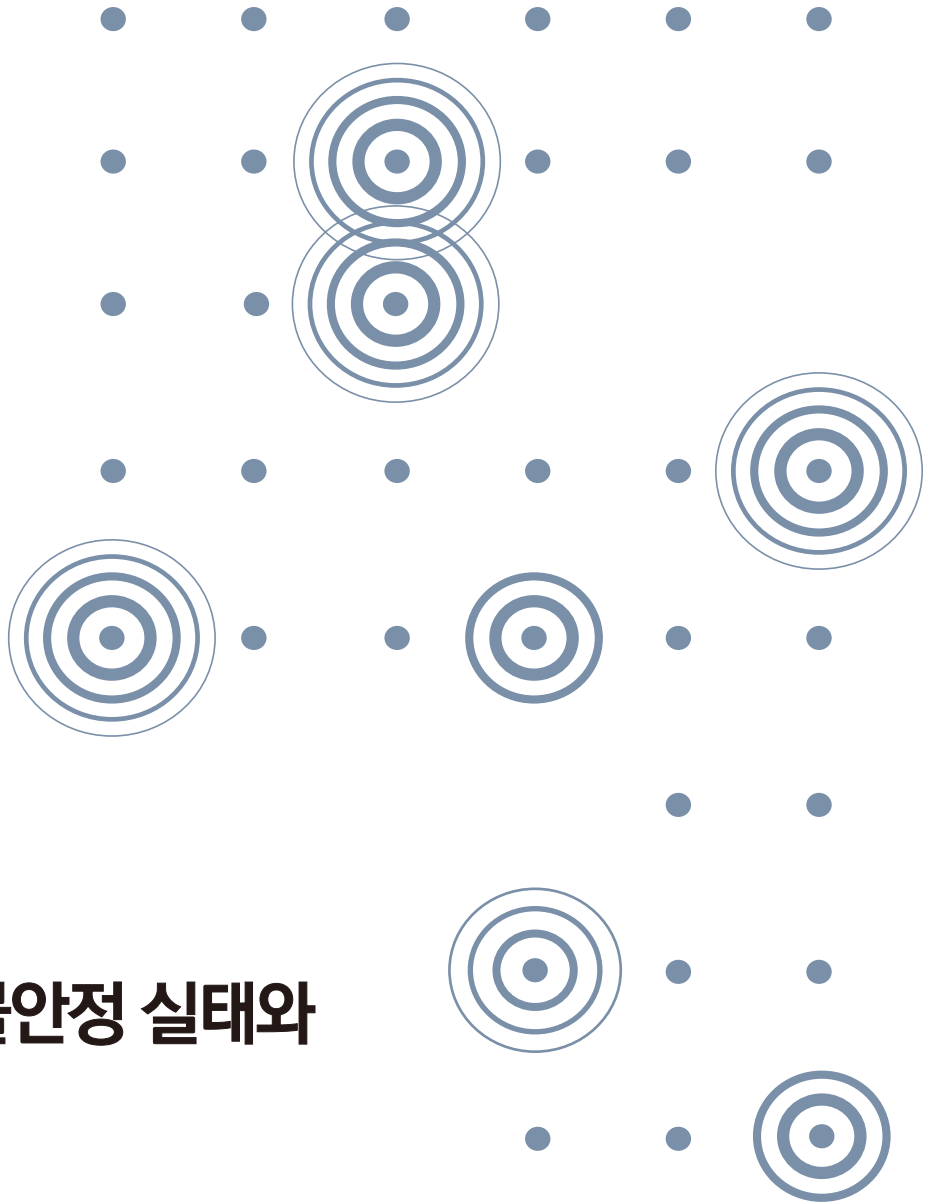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80호 2023. 10. 9



—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

변금선

부연구위원

이혜림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80호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백선혜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10월 9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10. 9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80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지원 방안

변금선 부연구위원
02-2149-1136
gsbyun@si.re.kr

이혜림 연구원
02-2149-1414
hyerimlee@si.re.kr

요약	3
I.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	4
II.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5
III. 소득보장정책 실효성 진단	10
IV.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12

요약

기존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상황·유지·하향이동, 빈곤 진입률 등의 지표로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고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2020년 기준 약 22만 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소득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빈곤진입률은 증가하고, 소득지위는 유지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확인돼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소득 하향 이동확률은 증가하고 소득 유지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빈곤선 바깥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이 '16년 11.3%에서 '20년 13.9%로 증가해 정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이 포착되었다.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18~64세 근로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 필요

소요예산을 고려해 ① 현행 소득보장제도, ② 기본소득, ③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서울시 안심소득)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와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는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설계, ②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고려, ④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지원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

I.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

I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소득 불안정 위험의 심화

기존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의 심화

-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의 심화로 소득 하락위험이 증대
 - 2019년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인 가구 기반의 전통적 소득보장정책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경험하는 소득불안정을 포괄하는 데 한계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근로 연령층의 잦은 이직과 실업으로 인한 소득 하락위험이 커짐.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 사건 대부분은 근로연령층인 청년, 중장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함께 사는 다인 가구였음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는 급격한 소득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구조

- 소득보장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각지대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급격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기에 역부족
 - 2020년 서울시민 중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빈곤층은 6%임.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 기초연금 등을 포함해도 빈곤층 10명 중 4명은 사각지대
-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는 외생적 소득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 조세로 운영되는 사회수당은 대상의 포괄성은 높으나 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고,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 불충분한 급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서울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대응하여 자체적 수당과 소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급요건을 생애 1회로 제한하거나 수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연령층 소득불안정 대응에 한계

[표 1]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구분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사회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청년수당	-	-
사회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조세지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		기초연금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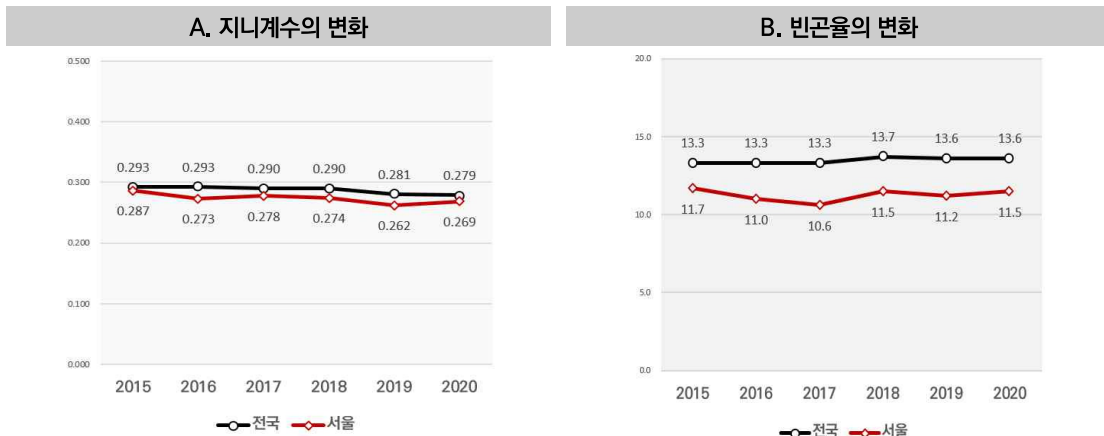
주: 표 본문의 굵은 글씨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소득지원정책

II.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

I 서울,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수준 양호하나, 소득불안정 위험은 높아

서울시민의 소득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전국보다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편

- 한국복지패널 11차~16차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전국보다 불평등과 빈곤율 수준이 양호함
 - 서울의 중위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전국에서 소득 증가 폭이 큼
 - 서울은 전국보다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낮고 최근 수치가 더욱 개선되는 경향



주: 변금선 외(2023),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향”, pp.63-64의 [표 3-8]과 [표 3-9]의 분석 결과를 이용해 도식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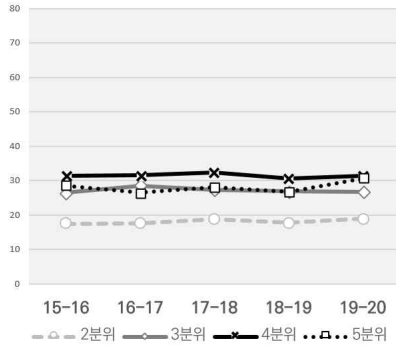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1]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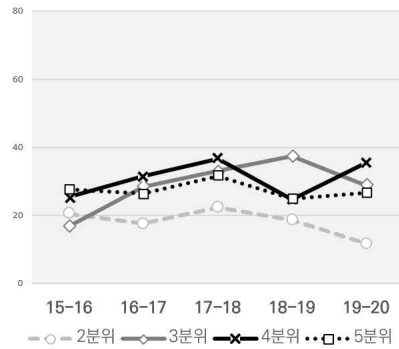
전국보다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의 폭이 더 크고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나타나

- 소득불안정을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 유지되거나,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년간의 소득변화를 포착
 - 한국복지패널 11차~16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개 연도(t, t+1)를 결합한 균형패널로 이행확률 산출
 - 전년도 소득분위와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소득의 하향, 유지, 상향 이행확률을 분석
- 소득이동 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유지 비율이 높아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포착
 - 전년도 소득분위별 이행확률 분석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에서 이전 시점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 소득 하위층은 계속 소득 하위층에, 상위층은 계속 상위층에 머무르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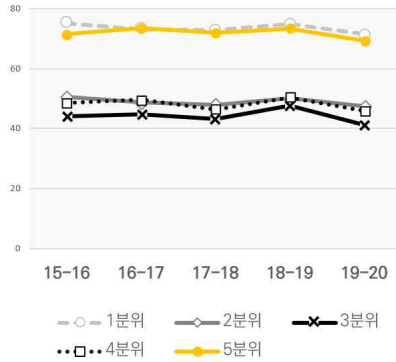
A. 소득분위별 소득 하향 이동 확률: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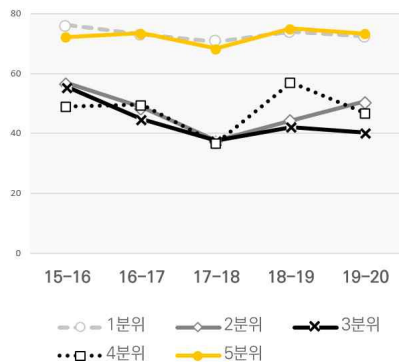
B. 소득분위별 소득 하향 이동 확률: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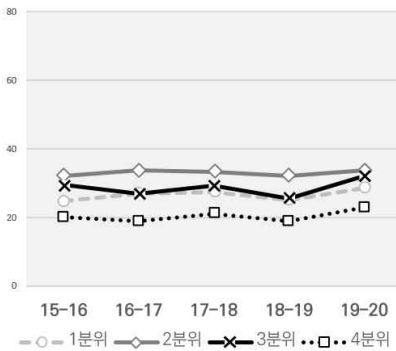
C. 소득분위별 소득 유지 확률: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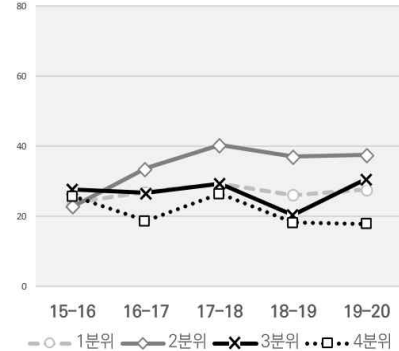
D. 소득분위별 소득 유지 확률: 서울



E. 소득분위별 소득 상향 이동 확률: 전국



F. 소득분위별 소득 상향 이동 확률: 서울



주: 변금선 외(2023) p.68 [표 3-11] 분석 결과를 활용해 도식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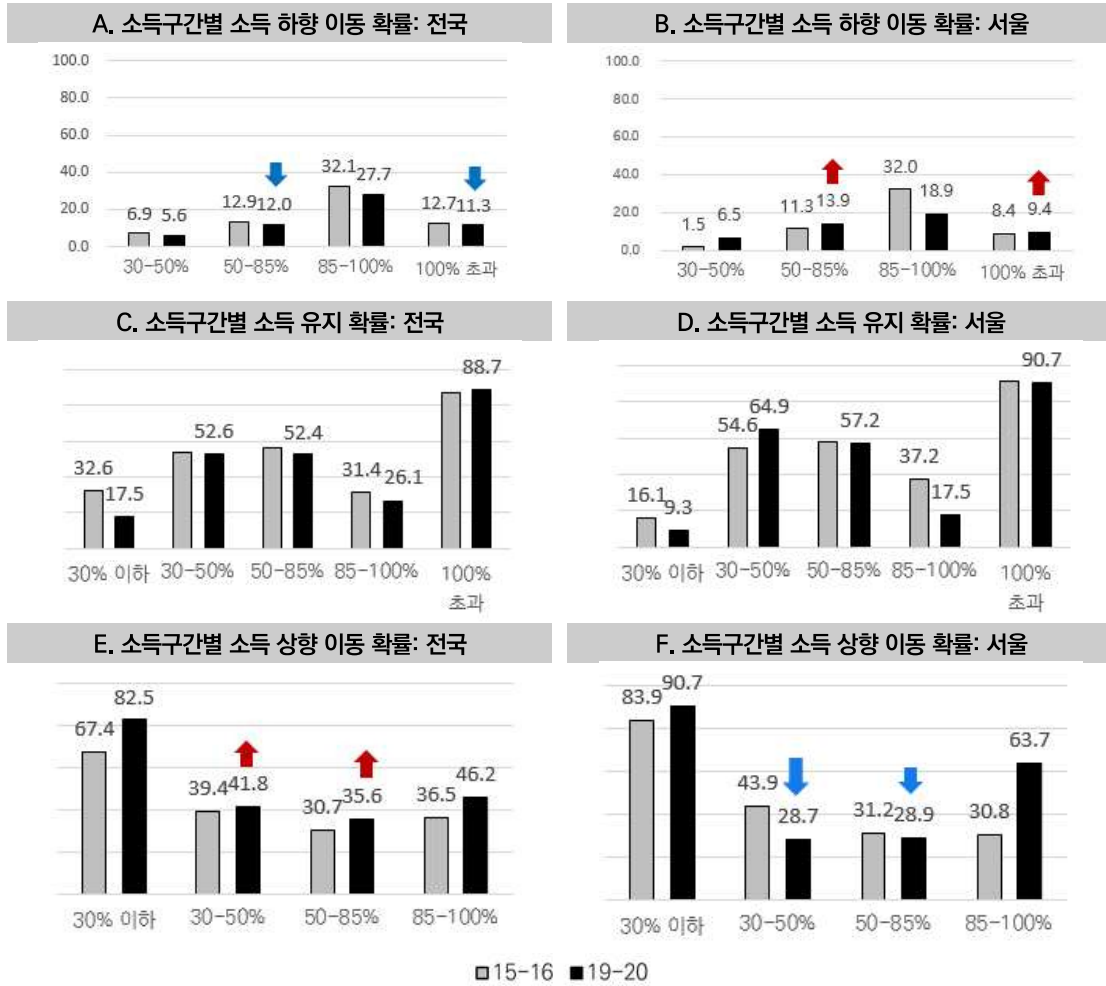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2] 전년도 소득분위별 소득 이동 확률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소득 하향 이동 위험이 크고, 빈곤층의 상향 이동 감소 우려

-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85%의 저소득 집단의 하향 이동은 증가하고, 상향 이동은 감소
 - 기준중위소득 50~85% 집단, 상향 이동 확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하향 이동 확률이 증가
 - 이는 정책적 빈곤선을 약간 넘어 기존 소득지원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소득 불안정성은 높지만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로 볼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30~50% 빈곤층의 상향 이동 또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주 : 변금선 외(2023) p.72 [표 3-12]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 도식화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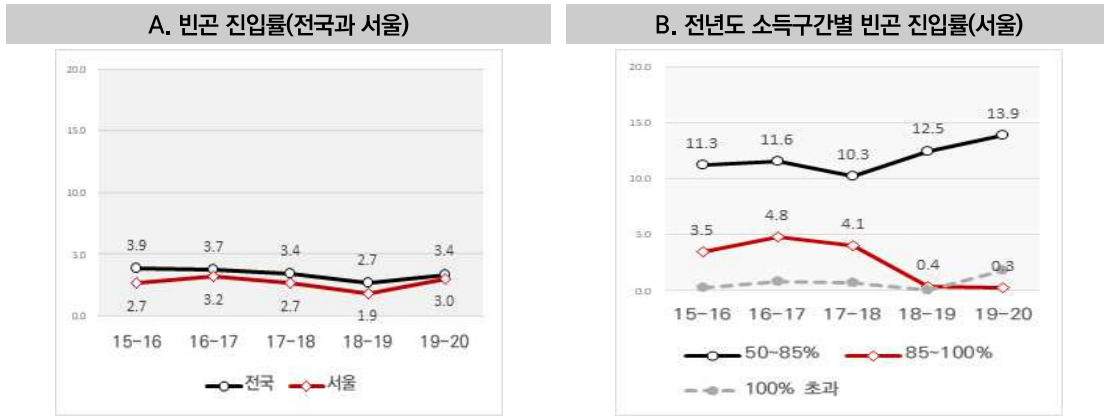
[그림 3] 이전 시점 소득구간별 소득이동 확률

Ⅰ 지난 6년간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 높아지고, 서울시민 17.9% 빈곤 경험해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 2016년 11.3%에서 2020년 13.9%로 증가

-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의 저소득 집단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하락하는 빈곤 진입률이 전국은 감소 추세이나 서울은 증가함
 - 서울의 빈곤 진입률은 2015년과 2016년 2.7%에서 2019년과 2020년 3.0%로 증가, 저소득 진입률은 감소

- 기준중위소득 50~85%의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 역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 빈곤 진입률은 2016년 11.3%에서 2020년 13.9%로 큰 폭으로 상승



주: A와 B는 변금선 외(2023) p.78 [표 3-17]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 도식화함. C와 D는 부록의 [부표 1-2]를 도식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 빈곤 진입률

서울시민의 17.9%가 6년 중 1년 이상 빈곤 경험, 35.7%가 저소득 경험

- 6년 균형패널을 이용해 6년간 빈곤, 저소득 누적 기간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 17.9%가 6년간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였으며, 35.7%가 저소득 경험
- 4년 이상 장기간 빈곤, 저소득을 경험한 경우는 각각 3.6%, 17.1%로 다수의 서울시민이 소득 불안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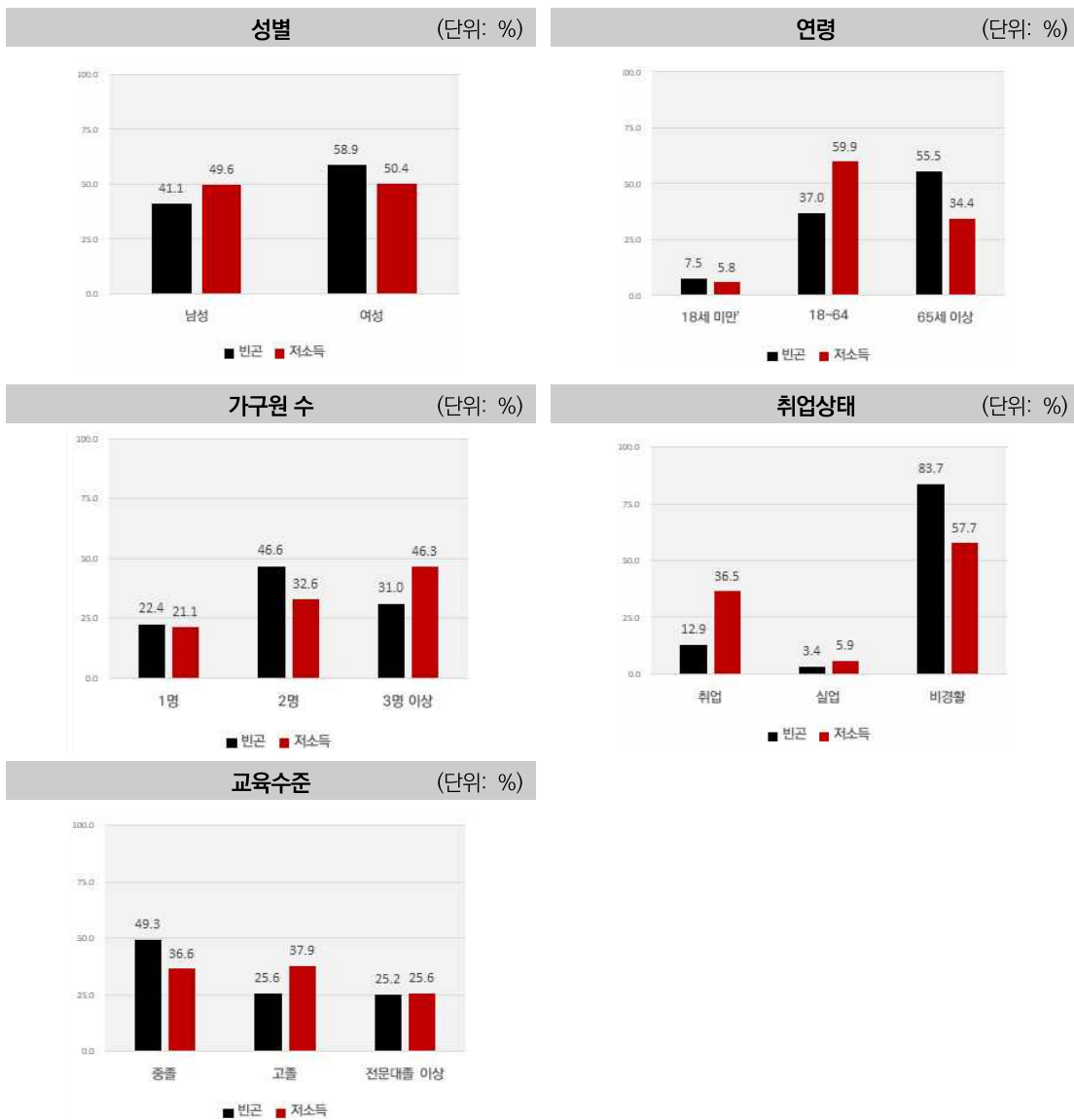
주 1: 변금선 외(2023)의 [표 3-20] 분석 결과를 활용해 도식화함
 주 2: 6개 연도 균형패널. 서울 거주자 1,4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 서울시민의 빈곤과 저소득 누적 경험 기간

Ⅰ 소득 하락위험 커진 저소득층, 청년과 중장년 등 근로연령층 비율 높아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 기존 빈곤층과 다른 특성

- 소득하락 위험이 증가한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남성, 18~64세 근로연령층, 3인 이상 다인 가구, 취업,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최저빈곤층-상대적으로 소득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주: 한국복지패널 16차(2020년) 조사자료 횡단면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 빈곤층(기준중위소득 50% 미만)과 저소득층(50~85% 이하) 특성 비교

Ⅲ. 소득보장정책 실효성 진단

Ⅰ 현행 소득보장정책 모형별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현행 제도,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의 소득분배와 소득안정 효과 비교·분석

- 한국복지패널 14~15차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제도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와 소득안정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
 -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
 - 기본소득모형은 월 30만 원의 정액급여와 현행 생계급여를 포함
 - NIT 모형은 기준중위소득 85%의 선정기준소득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재산기준은 순자산 중위값의 150% 이하로 설정
- 각 모형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적용한 4가지 모형에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 실시
 - 모형A는 현행 소득보장제도 소요 예산으로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총합(연 25~29조 원, 서울 기준 4.3조 원)
 - 모형B는 생계급여를 유지한 상태에서 월 30만 원 기본소득(UBI)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적용(연 180~181조 원, 서울 기준 33.9~34조 원)
 - 모형C는 재산기준 없는 부의 소득세(NIT)를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적용(연 40~41조 원, 서울 기준 6.4조 원)
 - 모형D는 재산기준 있는 NIT를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적용(연 34~35조 원, 서울 기준 4.8~4.9조 원)
 -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한 추정 예산임.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기초보장급여 수급자 이외 응답자는 자기기입식으로 소득을 조사하므로 소요예산 과대추정 예상. 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소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득분배와 소득안정 효과 평가의 기준으로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4가지 지표 선정
 - 대상포괄성은 주요 소득보장급여의 수급률로 평가
 - 급여효율성은 총 급여액 중 빈곤갭 감소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로 평가
 - 급여적정성은 급여 전 소득과 급여 후 소득의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차이로 평가
 - 소득안정성은 급여 전후의 소득구간 이동으로 평가
 - 소득하락과 저소득유지비율이 감소할수록 소득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표 2] 소득분배 및 소득안정 효과 평가 기준

구분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지표	수급률	총 급여액 중 빈곤갭 감소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소득구간 이동

I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형인 부의 소득세(NIT), 소득하락 완화 효과 커

재산기준 없는 부의 소득세(NIT)의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가장 높아

-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기본소득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 부의 소득세(NIT)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가 큼
 - 기본소득의 경우 모든 대상에게 정액 급여를 지급하므로 대상포괄성은 높지만(100%),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 효과가 매우 낮았음
 - 부의 소득세(NIT)는 선별성이 높아 대상포괄성은 낮지만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효과를 보임
 - 재산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적용하지 않을 때 급여 효율성 및 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표 3]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대상포괄성 (수급률 %)	급여효율성 (빈곤갭 감소 소요 예산 비율 %)	급여적정성 (빈곤율 감소율 %p)	소득안정성 (소득하락 감소율 %p)
모형 A 현행 소득보장 소요 예산 (서울 기준 4.3조)	현행 소득보장제도	24.4	68.9	-1.4	-3.0
	기본소득 (월 3만 원)	100.0	32.8	-1.9	-1.7
	재산기준 없는 NIT (기준중위 71%)	13.7	92.3	-2	-4.5
	재산기준 있는 NIT (기준중위 85%)	10.9	88.8	-2.1	-3.4
모형 B 기본소득 월 30만 원 소요 예산 (서울 기준 33.9~34조)	기본소득 (월 30만 원)	100.0	13.9	-6	-7.2
	재산기준 없는 NIT (기준중위 163%)	56.6	28.8	-12.5	-12.2
	재산기준 있는 NIT (기준중위 186%)	34.7	25	-8.6	-9.1
모형 C 재산기준 없는 NIT 소요 예산 (서울 기준 6.4조)	기본소득 (월 6만 원)	100.0	26.1	-2.4	-2.3
	재산기준 없는 NIT (기준중위 85%)	17.8	83.7	-4.8	-6.6
	재산기준 있는 NIT (기준중위 92%)	14.4	78.3	-3.7	-5.2
모형 D 재산기준 있는 NIT 소요 예산 (서울 기준 4.8~4.9조)	기본소득 (월 5만 원)	100	28.4	-2.0	-1.9
	재산기준 없는 NIT (기준중위 79%)	16.0	87.6	-3.5	-5.7
	재산기준 있는 NIT (기준중위 85%)	12.7	82.8	-3.4	-4.2

IV.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I. 서울시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득안정성 높이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서울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안심소득 추진

- 서울시는 2022년부터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실험을 추진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부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2022년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2023년부터 기준중위 85% 이하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향후 정책효과 분석 후 확대 예정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서울시민 중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이 악화되었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표방하는 부의 소득세(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가장 큼
 - 증가하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소득보장제도로써 안심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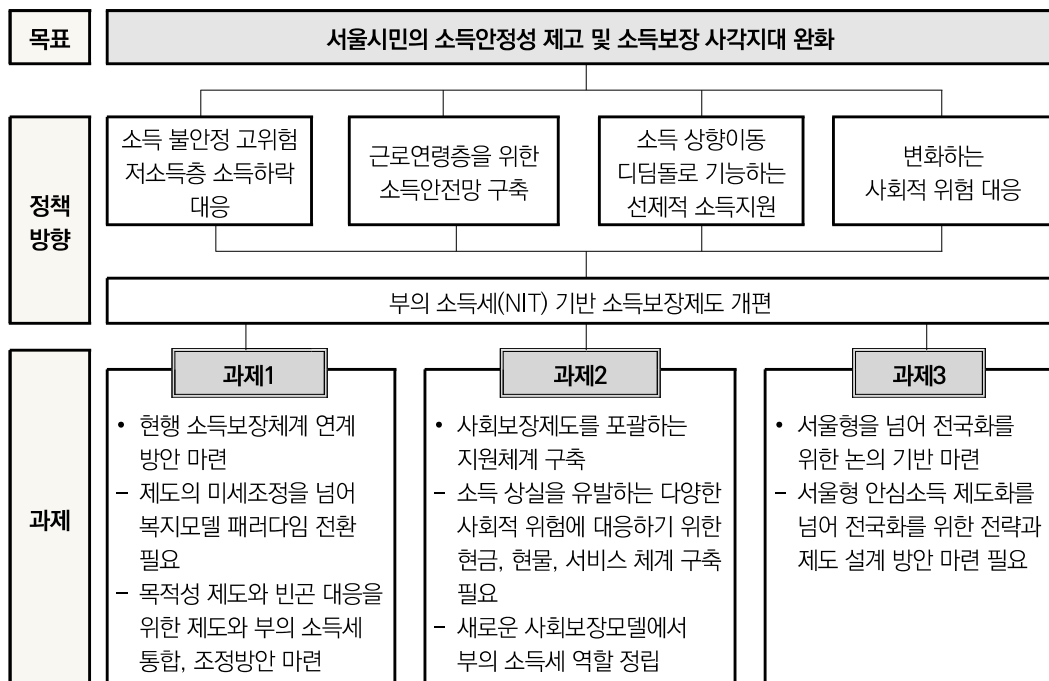
소득불안정에 대응하는 서울형 소득보장제도 구축 방안

-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설계
 - 소득 불안정성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
 - 기존 고령, 근로무능력자, 최저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을 구축할 필요
- 둘째, 근로연령층을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조건 부과 기준과 자활사업의 경직성은 근로연령대 저소득층이 소득 안전망에서 배제되도록 만들 우려
 -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는 저소득 근로연령층의 소득하락 위험을 높이고 있으므로, 근로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 셋째, 소득 하락을 예방하고 탈빈곤 기회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 소득보장제도가 낮은 소득을 유지하는 ‘최저’ 소득제도가 아니라, 소득 상향이동을 위한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개편
 - 소득 하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빈곤선 밑으로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

- 넷째,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소득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민의 소득하락은 일시적이고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다양한 위험을 통해 극단적 빈곤으로 악화됨
 -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더불어 시민의 변화하는 생애과정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의 미세조정을 넘어 복지모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구축해야

-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웰빙을 증진하고,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부의 소득세(NIT)를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
 - (과제1) 부의 소득세(NIT)를 중심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현금급여를 어떻게 통합, 연계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의 역할과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
 - 새로운 사회보장모델에서 부의 소득세의 역할을 정립하고 목적성 복지급여 및 빈곤 대응 소득지원제도와 부의 소득세의 통합, 조정 방안 마련
 - (과제2)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소득 하락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현물, 돌봄 등 서비스 체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재편할 필요
 - 새로운 사회보장모델에서 부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한 안심소득의 역할을 정립해야 함
 - (과제3)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부의 소득세(NIT) 기반 소득지원체계의 재구조화 논의 필요
 -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서는 타 제도와의 연계, 조정 등 설계 방안 마련 필요



[그림 기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 방향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